



### 정통부, 2G-3G간 번호이동성제도 도입

앞으로 3세대 이동통신인 WCDMA 서비스에 신규 가입하려면 기존 식별번호인 '011, 016, 019, 017, 018' 사용을 포기하고 '010' 번호로 전환해야 한다. 또 2004년 이후 신규가입하면서 '010' 번호를 받은 2G서비스 가입자들은 현재 사용중인 번호를 그대로 WCDMA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이르면 5월말 통신위원회에 '2G-3G간 번호이동성제도 도입'을 안건으로 올려 이같은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최근 이동통신 3사에게 2G-3G간 번호이동성 제도에 대한 각 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부안을 마련해 5월말 또는 6월 13일경 개최예정인 통신위 전체회의에 이를 상정키로 했다.

정통부는 국가자원의 번호가 특정사업자의 자산이 되는 것을 막고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을 위해 '010'으로의 통합을 유도한다는 원칙에 따라 2G-3G간 번호이동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2G 신규가입을 통해 '010' 번호를 이미 부여 받은 가입자의 경우 3G로 이동시 번호를 그대로 유지하는 번호이동성제의 대상이 된다.

정통부는 '010' 이용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 3,700만 명의 80%인 2,900만 여명을 넘어서는 2008년 경 이후부터 가입자들의 식별번호를 강제로 통합하는 정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당초 '010' 도입 5년 경과 시점인 2007년 강제통합키로 했으나 이용자의 편익을 고려해 전체 이용자의 80~90%가 '010'으로 이동한 시점으로 통합시점을 연기한 바 있다.

### 정통부, 공개 SW 시범사업기관 선정

정보통신부는 공개 소프트웨어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2005년 공개SW 시범사업'의 대상기관으로 우정사업본부, 공군본부 등 11개 기관을 선정했다. 올해 공개 SW 시범사업에는 총 37개 기관이 신청해 지난해(24개)에 비해 크게 늘었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보건복지부(전자문서 협업시스템 및 모바일 그룹웨어),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데스크톱 리눅스 기능 개선), 통일부(통일업무정보 공유시스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디지털 멀티미디어 통합홍보시스템), 전라북도청(공문서 자동집계 및 DB 통계분석시스템), 전라남도청(건설공사 통합관리 시스템), 창원대학교(대학캠퍼스 시설물 및 조경관리 시스템)가 선정됐다.

정통부는 5월 안에 시스템 구축업체를 선정하고, 6월초부터 시스템 구축을 시작해 오는 11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우정사업본부의 리눅스 기반 인터넷 banking,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 등 공개SW 이용자의 불편을 해결할 수 있는 과제와 공군본부의 국방정보체계 통합 툴 개발 및 시범체계 구축 등 업무시스템 과제가 포함돼 다양한 성공사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정통부, 위치정보보호법률 시행령안 마련

정보통신부가 지난 3일 한국전산원에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 법안은 올 1월 제정·공포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7월 27일 전면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자리였다. 정통부는 이 공청회와 5월 9일까지 예정된 입법예고 기간에 제시된 의견을 제정(안)에 반영한 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의를 거쳐 6월중에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올 7월 법률이 전면 시행되면 성장기에 있는 위치정보 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업계, 연구 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위치정보산업이 활성화 되면 민간에 의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선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길 안내, 주변 음식점 찾기 등 자기위치 기반서비스와 본인 동의하에 제3자에게 자기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친구찾기 서비스, 동의없이 가능한 긴급구조 서비스 등이 활기를 띠 것으로 전망된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위치정보의 오남용 피해를 줄이고 부당한 침해로부터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관련 법률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해 산업 활성화를 꾀할 방침이다.

문의: 정보통신부 정보기획실 정보보호정책과

김남철 사무관 (750-1251, nck04@mic.go.kr)

## 휴대전화 주파수 이용기간 설정

내년 하반기부터 SK텔레콤의 800MHz와 KTF, LG텔레콤 등이 사용하는 PCS 주파수에 대해 이용기간이 설정된다. 이 주파수들 사업자가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주파수를 할당받는 기존의 할당대가 방식 주파수보다 5년 단축된 최장 15년 범위 안에서 사업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부는 과거 심사할당 방식의 배분으로 무기한 사용이 가능했던 셀룰러(800MHz)와 PCS 주파수를 사용하는 통신업체에 대해 이용료 및 사용기간 등을 설정할 근거를 전파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학계와 시민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 입법예고하고 올해 정기국회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정통부의 이번 방침은 와이브로, 위치정보 등의 주파수 사용업체들이 2000년 개정 전파법에 따라 사용료 등을 주기적으로 설정하는 것과 달리 현행법 시행 이전에 심사할당 방식으로 주파수를 배분받은 업체는 이용기한 등의 제한이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마련한 것이다. 주파수 이용료는 매출액의 1~3%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수치는 전문가 의견을 거쳐 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TRS(주파수공용방식) 주파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용기간과 이용료 설정방안 등을 검토하지 않을 방침이다. 법 개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면 해당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 가운데 일정기한이 경과한 업체는 주파수를 정부에 반납하거나 사용료와 이용기한 재설정 등을 통해 관련 주파수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 산자부, 부품소재 개발에 1,600억 원 투입

산업자원부는 올해 핵심 부품·소재 기술개발을 위해 1,600억 원을 투입키로 하고, 이 가운데 신규 과제에 총 768억원을 배정한다고 9일 밝혔다. 산자부는 지난 1월 확정된 부품소재 산업발전 전략의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세부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새롭게 지원되는 신규과제와 지원규모는 △전기·전자, 자동차, 기계업종의 10대 전략 부품·소재 350억원 △섬유·화학·금속 및 전자장비 118억원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대비 수입급증 우려품목 100억원 △투자기관 연계형 단속기술개발 과제 200억원 등이다.

## IT839 3대 인프라 통합전략협의회



IT839 전략의 3대 인프라인 RFID/USN, IPv6, BcN의 범국가적 인프라 구축 추진전략 논의를 위한 통합전략협의회가 지난 9일 오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열린 협의회에는 진대제 정통부장관, 노준형 차관을 비롯해 국방부, 산자부, 조달청 등의 정부기관과 통신사업자, 방송사, 제조업체 CEO, 학계 및 연구기관 등 60개 기관에서 90여명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이날 3대 인프라 구축 방향 및 활성화 방안, 시범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 사업추진 현안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RFID/USN 수요활성화를 위해 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시범사업에 대한 발표와 민간투자 및 국내 기술개발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고도화된 USN 개념과 전망에 대해 설명하고 산업 활성화를 위한 모바일 RFID 포럼 및 u-City 포럼 추진상황을 발표했다. 한국전산원은 IPv6 보급 확산을 위해 추진 중인 시범사업을 와이브로, 홈네트워크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며 ETRI, 삼성전자,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는 IPv6 기반 장비 개발현황 및 상용화 계획을, ISP협회에서는 IPv6 도입실적과 향후 일정을 제시했다. BcN 구축과 관련, 신규 참여한 케이블 BcN컨소시엄의 시범사업 추진현황 및 Open API 및 QoS 라우터 상용화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정책 주관부처를 비롯해 연구개발, 공급자, 수요자 등 가치사슬에 걸쳐있는 모든 관계자가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상호간의 사업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조율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전략협의회를 통해 국가 인프라 구축 추진 정책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의: 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실 이용석 서기관 (750-1241, yslee@mic.go.kr)